

< 2016 지방7급 행정학 정답 및 해설 >

1.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높이고 그 역할을 확대하는 민간화(privatization)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진입규제 강화
- ② 바우처 제공
- ③ 정부계약(contracting out) 활용
- ④ 공동생산(co-production)

[정답] ①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높이고 그 역할을 확대하는 민간화(privatization)를 위해서는 진입규제 강화보다는 진입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2. 다음은 예산의 이용과 전용에 대한 설명이다. ㉠과 ㉡에 해당하는 것은?

이용은 국회에서 승인된 예산 중 (㉠) 간 울타리를 뛰어 넘어 자금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면, 전용은 (㉡) 간 울타리를 뛰어 넘어 자금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 ㉠ ㉡
- | | |
|---------------|-------------|
| ① 장 | 관, 항, 세항, 목 |
| ② 장, 관 | 항, 세항, 목 |
| ③ 장, 관, 항 | 세항, 목 |
| ④ 장, 관, 항, 세항 | 목 |

[정답] ③ 이용은 입법과목인 장, 관, 항 간(㉠)의 율통을, 전용은 행정과목인 세항, 목 간(㉡)의 율통을 의미한다.

3. 의사결정모형 중 쓰레기통 모형의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진뻐기 결정
- ② 의사결정을 구성하는 네 가지의 흐름
- ③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 ④ 갈등의 준해결

[정답] ④ 갈등의 준해결은 쓰레기통모형이 아니라 회사모형(연합모형)의 내용에 해당한다.

4.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방교부세의 기본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줄임으로써 기초적인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 ② 세외수입은 연도별 신장률이 안정적이며 그 종류와 형태가 다양하다.
- ③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의 지방교부세가 운영되고 있다.
- ④ 대부분의 국고보조사업에는 차등보조율이 적용되고 있다.

[정답] ① 세외수입은 조세수입에 비해 그 종류와 형태가 다양하지만 연도별 신장률이 불안정적이며, 지방교부세에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육세, 부동산교부세가 있으며, 분권교부세가 폐지되고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되었다. 대부분의 국고보조사업에는 기준보조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지방교부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부세의 종류)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변경하여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차등보조율의 적용) ① 기획재정부장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5. 정부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 ②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규제영향분석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관료에게 규제비용에 대한 관심과 책임성을 갖도록 유도한다는 점이다.
- ④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두고 있다.

[정답] ④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두고 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 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제23조(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제2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6. 행정 조직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갈등 요인이 아닌 것은?

- ① 개인의 이기적인 태도
- ② 기능이나 업무의 특성에 따른 분업구조
- ③ 제한된 자원의 하위 부서 간 공유
- ④ 업무의 연계성으로 인한 타인과의 협조 필요성 증가

[정답] ① 개인의 이기적인 태도는 갈등이 발생하는 요인 중 구조적 측면이 아니라 인간적 측면에 해당한다.

7. 공무원 교육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현장훈련(on the job training)은 피훈련자가 실제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무수행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방법이다.
- ② 강의, 토론회, 시찰, 시청각교육 등은 태도나 행동의 변화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 ③ 액션러닝(action learning)은 소규모로 구성된 그룹이 실질적인 업무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내고 그 과정에서 성찰을 통해 학습하도록 하는 행동학습(learning by doing) 교육훈련 방법이다.
- ④ 감수성훈련(sensitivity training)은 대인관계의 이해와 이를 통한 인간관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 ② 훈련의 목적에 따라 훈련 방법을 분류해 보면, ① 지식의 습득을 위한 방법으로 강의, 토론회, 사례연구, 시찰, 시청각교육, 사이버 강좌 등이 있으며, ② 기술 연마를 위한 방법으로 사례연구, 모의연습, 현장훈련, 전보·순환보직, 실무수습, 시청각교육 등이 있고, ③ 태도·행동의 교정을 위한 방법으로는 사례연구, 역할연기, 감수성훈련 등이 있다. 강의, 토론회, 시찰, 시청각교육 등은 태도나 행동의 변화보다는 지식의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8. 정책평가의 논리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내적타당성이란 다른 요인들이 작용한 효과를 제외하고 오로지 정책 때문에 발생한 순수한 효과를 정확히 추출해 내는 것과 관련되는 개념이다.
- ② 내적타당성을 위협하는 성숙요인이란 순전히 시간의 경과 때문에 발생하는 조사대상집단의 특성변화를 말한다.
- ③ 진실험설계의 주요 형태 중 하나인 단일집단 사전사후측정설계는 동일한 정책대상집단에 대한 사전측정과 사후측정을 통해 정책효과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 ④ 결과변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제3변수들을 식별하여 통계분석모형에 포함시킨 후 정책효과를 추정하는 것은 비실험적 설계의 한 예이다.

[정답] ③ 단일집단 사전사후측정설계는 동일한 정책대상집단에 대한 사전측정과 사후측정을 통해 정책효과를 추정하는 방식(정책실시 전후 비교설계방식)은 비실험 설계에 해당한다.

9. 로위(Lowi)는 강제력의 행사방법과 강제력의 적용영역 차이에 따라 정책을 네 가지(A~D)로 유형화하고, 정책유형별 특징과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강제력의 행사방법 \ 강제력의 적용영역	개별적 행위	행위의 환경
간접적	A	B
직접적	C	D

- ① A에서는 정책내용이 세부단위로 쉽게 구분되고 각 단위는 다른 단위와 별개로 처리될

수 있다.

- ② B에는 선거구 조정, 정부조직이나 기구 신설, 공직자 보수 등에 관한 정책이 포함된다.
- ③ C에서는 피해자와 수혜자가 명백하게 구분되며 정책결정자와 집행자가 서로 결탁하여 갈라먹기식(log-rolling)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
- ④ D에서는 지방적 수준에서 분산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정답] ④ A는 배분정책, B는 구성정책, C는 규제정책, D는 재분배정책에 해당한다. 재분배정책(D)은 형평성을 위한 정책이며, 소득분배의 형평성은 지방정부보다는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루빈(Rubin)의 ‘실시간 예산운영(Real Time Budgeting)’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입 흐름에서 의사결정-‘누가, 얼마만큼 부담할 것인가’에 관한 의사결정으로 의사결정의 흐름 속에는 설득의 정치가 내재해 있다.
- ② 세출 흐름에서 의사결정-‘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에 관한 의사결정으로서 선택의 정치로 특징지어지며, 참여자들은 지출의 우선순위가 재조정되기를 바라거나 현재의 우선순위를 고수하려고 노력한다.
- ③ 예산 균형 흐름에서 의사결정-‘예산 균형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관한 의사결정으로 제약조건의 정치라는 성격을 지니며, 예산균형의 결정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범위 및 역할에 대한 결정과 연계되어 있다.
- ④ 예산 과정 흐름에서 의사결정-‘계획된 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사결정으로 기술적 성격이 강하고 책임성의 정치라는 특성을 지니며, 예산계획에 따른 집행과 수정 및 일탈의 허용 범위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다.

[정답] ④ 보기④는 ‘예산과정 흐름에서 의사결정’이 아니라 ‘예산집행 흐름에서 의사결정’이다.

루빈(Rubin)의 실시간 예산운영(Real Time Budgeting: RTB)모형		
루빈의 실시간 예산운영모형은 서로 성질이 다르지만 서로 연결된 세입, 세출, 균형, 집행, 과정의 다섯 개의 의사결정 흐름이 통합되면서 나타나는 의사결정모형을 말한다. 여기서 실시간이란 한 결정의 흐름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이, 다른 결정의 흐름 및 환경으로부터 오는 정보와 결정에 계속적으로 적응하는 것을 말한다.		
흐름	정치	관심
세입 흐름	설득의 정치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 것인가? 세입원의 기술적 추계
세출 흐름	선택의 정치	예산획득을 위한 경쟁과 예산의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 기준예산의 기술적 추계
예산균형 흐름	제약조건의 정치	예산균형의 정의, 방법 정부의 범위와 역할에 대한 결정
예산집행 흐름	책임성의 정치	예산계획에 따른 집행과 수정 및 일탈의 허용 범위
예산과정 흐름	누가 예산을 결정하는가의 정치	행정부와 사법부, 시민과 관료간의 결정권한의 균형

11. 기존 전자정부와 비교한 스마트 전자정부의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개인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②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 TV 등 다매체 활용
- ③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개발
- ④ 1회 신청으로 연관 민원 일괄처리

[정답] ③ 스마트 전자정부는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개발이 아니라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지면,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 TV 등 다매체 활용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진다.

12. 윌슨(Wilson)의 ‘행정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 1887)’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개혁을 통해 특정지역 및 계층중심의 관료파벌을 해체하고자 했다.
- ②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을 강조했다.
- ③ 정치와 행정을 분리하고자 했다.
- ④ 효율적 정부 운영에 관심을 두었다.

[정답] ① 정부개혁을 통해 특정지역 및 계층중심의 관료파벌을 해체하고자 등장한 것은 업관주의이다.

13. 관료제 병리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동조과잉과 형식주의로 인해 ‘전문화로 인한 무능’ 현상이 발생한다.
- ② ‘피터의 원리(Peter Principle)’가 지적하듯이 무능력자가 승진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 ③ 상관의 권위에 의존하면서 소극적으로 일을 처리하려는 할거주의가 나타난다.
- ④ 목표가 아닌 수단으로서의 규칙과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번문옥례(red tape) 현상이 나타난다.

[정답] ② 지나친 전문화는 ‘전문화로 인한 무능’ 현상과 할거주의를 유발하며, 목표가 아닌 수단으로서의 규칙과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우 동조과잉현상이 초래된다.

14. 업관주의와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업관주의는 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한다는 장점이 있다.
- ② 실적주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다.
- ③ 잭슨(Jackson) 대통령이 암살당한 사건은 미국에서 실적주의 도입의 배경이 되었다.
- ④ 업관주의는 공직의 상품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정답] ③ 미국에서 실적주의 도입의 배경이 된 사건은 가필드(Garfield)대통령의 암살사건이다.

15. 예산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입법부가 사전에 의결한 사항만 집행이 가능하다는 사전의결의 원칙의 예외로는 긴급명령과 준예산 등이 있다.
- ② 예산총계주의는 모든 세입과 세출이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③ 정부가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을 직접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성 원칙의 예외로는 예비비, 계속비 등이 있다.

④ 예산은 결산과 일치해야 한다는 예산 엄밀성의 원칙은 정확성의 원칙이라고도 불린다.
 [정답] ③ 정부가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을 직접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통일성 원칙'의 예외로는 특별회계, 기금, 목적세, 수입대체경비 등이 있다.

16.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투표제도, 주민발안제도, 주민소환제도가 모두 시행되고 있다.
- ② 지방자치법은 주민감사청구 요건으로 시·군·자치구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 5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 적이 있다.
- ④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답] ② 지방자치법은 주민감사청구 요건으로 시·군·자치구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7. 비교행정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독자적인 연구대상을 확정하기가 어렵다.
- ② 환경과 행정의 교류적 관계를 경시한 정태적 접근이다.
- ③ 처방성과 문제해결성을 강조함에 따라 행정의 비과학화를 초래하였다.
- ④ 행정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함으로써 행정의 독자성을 무시하고 행정의 종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답] ③ 처방성과 문제해결성을 강조함에 따라 행정의 비과학화를 초래한 것은 비교행정이 아니라 발전행정이다.

18. 메이(May)는 정책의제설정의 주도자와 대중의 관여 정도에 따라 정책의제설정과정을 네 가지 유형(A~D)으로 구분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책의제 설정의 주도자 \ 대중의 관여 정도	대중의 관여 정도	
	높음	낮음
민간	A	B
정부	C	D

① A는 외부집단이 주도하여 정책의제 채택을 정부에게 강요하는 경우로 허쉬만(Hirschman)이 말하는 ‘강요된 정책문제’에 해당된다.

② B의 경우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가진 집단은 대중들에게 정책을 공개하여 지지를 획득하려고 한다.

③ C에서는 이미 민간집단의 광범위한 지지가 형성된 이슈에 대하여 정책결정자가 지지의 공고화(consolidation)를 추진한다.

④ D는 정부의 힘이 강하고 이익집단의 역할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정답] ② A는 외부주도형, B는 내부접근형, C는 굳히기형, D는 동원형에 각각 해당한다. 내부접근형의 경우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가진 집단은 대중들에게 정책을 공개하여 지지를 획득하려고 하지 않는다.

19. 공무원 보수제도 중 연봉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② 고정급적 연봉제에서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된다.

③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에서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된다.

④ 성과급적 연봉제와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의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실적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된다는 점에서 유사한 면이 있다.

[정답] ② 고정급적 연봉제에서 연봉은 기본연봉으로 구성된다. 즉 대통령 등 정무직에게 적용되는 고정급적 연봉제는 성과연봉 없이 기본연봉만으로 구성된다.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정의) 7. "연봉"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다음 각 목의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책과 계급을 반영하여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가. 기본연봉은 개인의 경력, 누적성과와 계급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간 금액을 말한다.

나.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간 금액을 말한다.

제39조(성과연봉의 지급) ①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및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의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업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② 성과연봉은 대상인원의 20퍼센트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8퍼센트, 대상인원의 30퍼센트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6퍼센트, 대상인원의 40퍼센트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4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그 밖의 인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3조(고위공무원의 보수) ①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31에 따라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한다.

②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기본연봉은 개인의 경력 및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책정되는 기준급과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직무등급에 따라 책정되는 직무급으로 구성한다.

20. 고충민원 처리 및 부패방지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 ②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감사청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 ③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시민고충처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정답] ②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감사청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2조(신분보장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72조(감사청구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사원장(이하 "당해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